

# Issue & Brief

## 서울시 정신건강 인력 현황

제3호 (2020-03)

발행일 / 2020. 12. 1.

발행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발행인 / 이해우

ISSN / 2734-1713

이메일 / smhc-advisory@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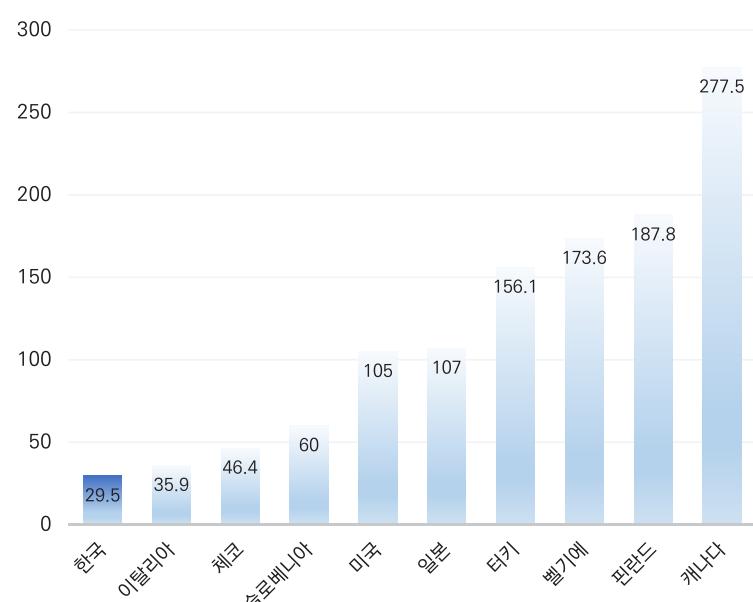
연락처 / 02-3444-9934(직통연결7번)

누리집 / <https://blutouch.net>



### OECD<sup>1)</sup> 국가별 정신건강 인력 비교

2019년 10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정신건강 동향에 따르면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의 인력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의 GHO [Global Health Observatory](#) 데이터 중에서 OECD 가입국별 정신 건강 인력 자원(정신 의료기관 인력 포함)을 살펴본 결과, 인구 10만 명 당 정신건강에 종사하는 인력 평균치는 97.1명(중간값 60.0명)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201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한국의 경우가 평균 29.5명이고, 서울시는 평균 29.2명이다.



[그림1.] OECD 주요국가 정신건강분야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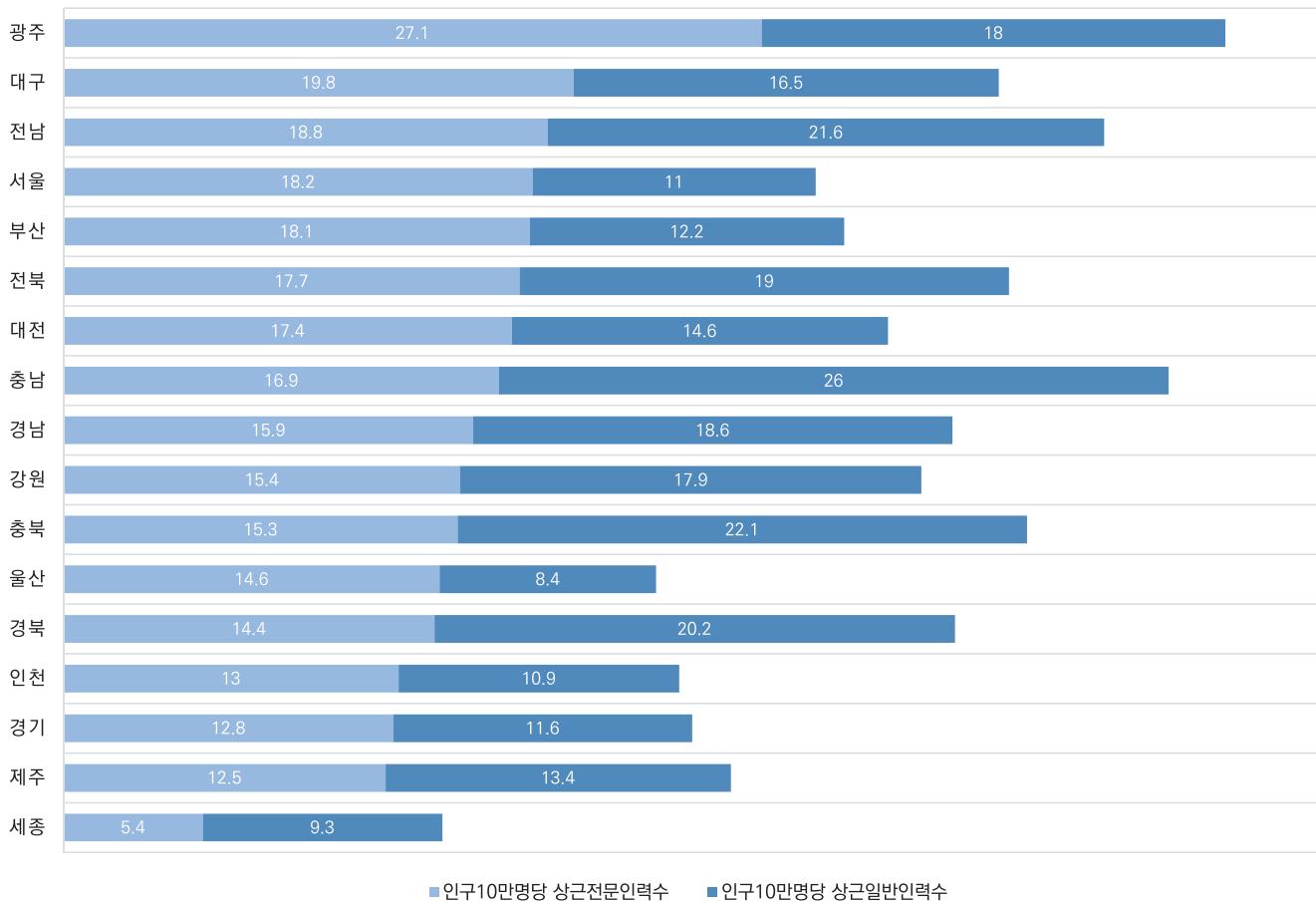
###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상근 인력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로 비교해 본 결과,<sup>2)</sup> 인구 10

1)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2) 중앙정신건강 복지사업지원단, NMHC 정신건강 동향 vol. 13, 2019.

만 명당 정신건강 분야 인력 수<sup>3)</sup>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45.1명)이며, 충남(42.9명), 전남(40.4명), 충북(37.4명), 전북(36.7명), 대구(36.3명) 순이었다. 이중 서울은 29.2명으로 12번째를 차지했다. 또한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분야 인력 수는 전국 평균인 32.0명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2.]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정신건강분야 인력 현황

## 서울시 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상근 인력

2019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상근 인력 수<sup>4)</sup>를 살펴보면 32.5명으로 2017년의 29.2명에서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 정신건강 인력을 전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서울시 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분야의 상근 인력을 전문 인력<sup>5)</sup>과 일반 인력<sup>6)</sup>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시

3) 정신건강 분야 인력 수 =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 분야 인력/주민등록 인구수 ×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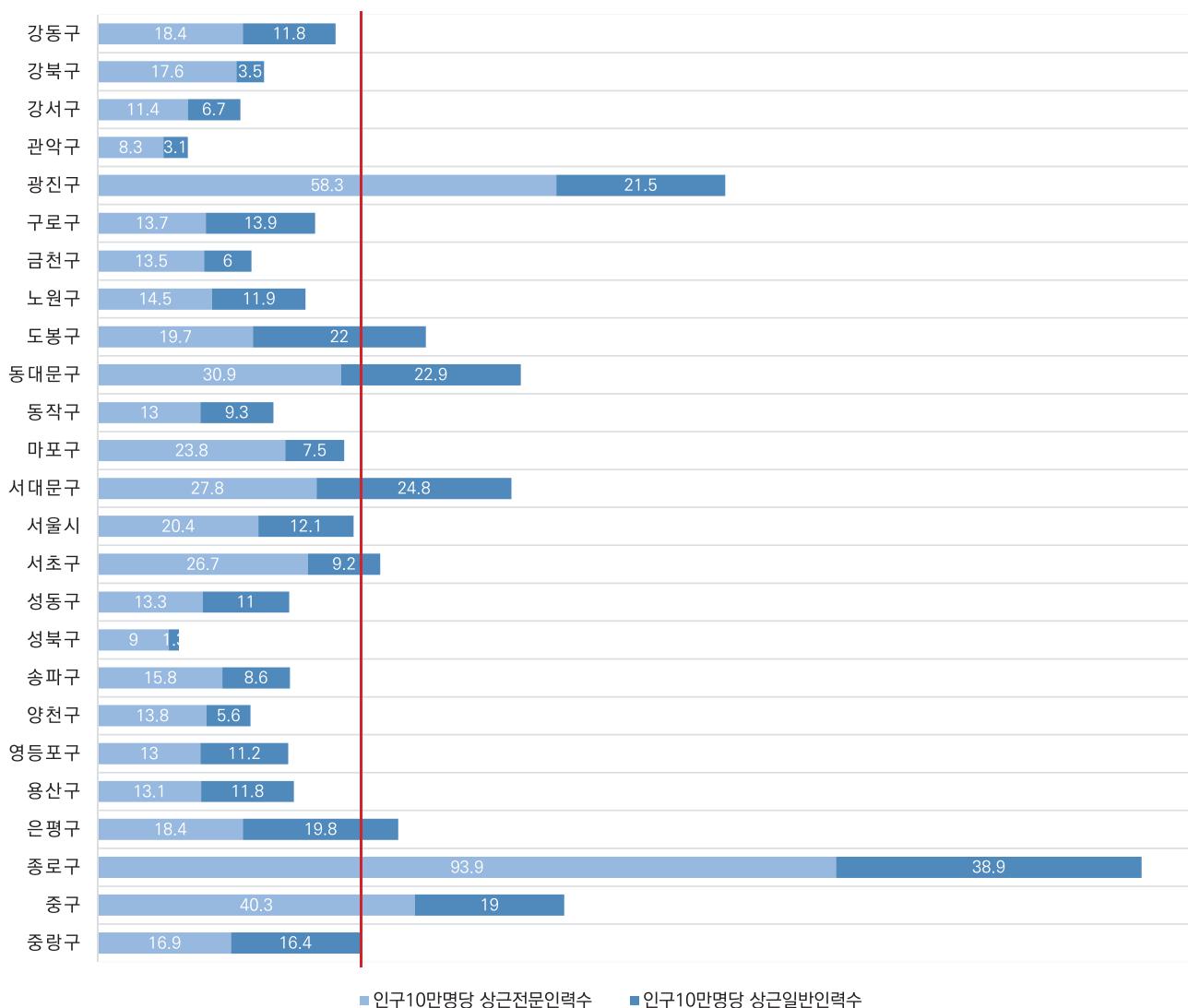
4) 정신건강 상근 인력 = 정신건강 전문 인력 + 정신건강 일반 인력

5) 전문 인력: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 심리사)

6) 일반 인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 심리사

전체 인구 10만 명당 상근 전문 인력 수는 20.4명이었고, 상근 일반 인력 수는 12.1명으로 대략 2:1의 비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분야 인력은 자치구의 특성상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자치구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 인력 수가 높았으나, 은평구, 용산구, 영등포구,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등의 경우 전문 인력 수와 일반 인력 수가 비슷하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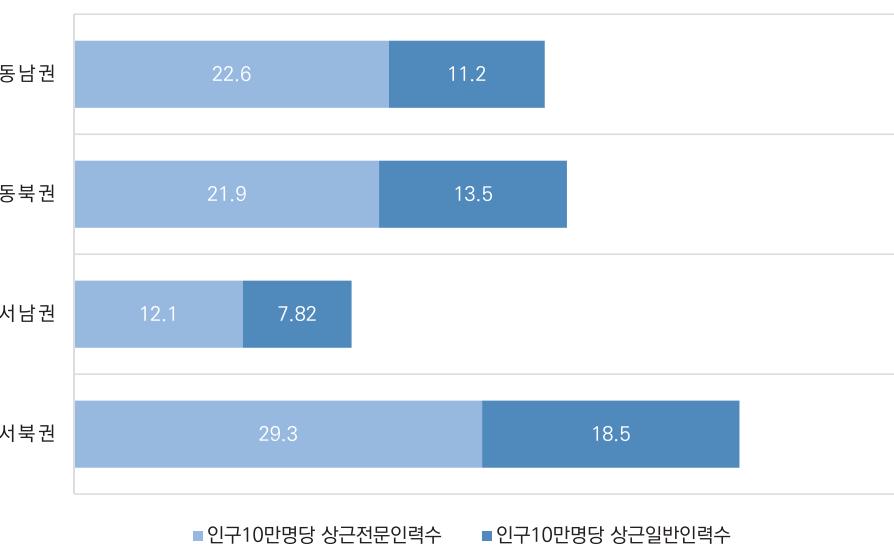
또한, 자치구별 정신건강 인력을 살펴보면, 종로구가 13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광진구(79.8명), 세 번째로는 중구(59.3명)가 많았다. 이와 같은 자치구별 인력의 숫자 차이는 정신 의료기관 때문에 발생한다. 정신건강 인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정신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일수록 인구 10만 명당 상근 전문 인력 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3개의 종합병원이 있는 종로구의 경우, 가장 많은 정신건강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서울시 구별 인구 10만 명 당 정신건강분야 인력 현황

## 서울시 권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상근 인력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살펴보면, 동북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금천구, 관악구),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생활권에서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상근 인력 수를 살펴보면, 동북 35.4명, 동남 33.8명, 서북 47.8명으로 전국 평균인 29.5명보다는 높았으나, 서남권의 경우 19.9명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 서울시 4개 권역별 정신건강분야 인력 수

## 서울시 정신건강 인력에 대한 제언

OECD에서 추산한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상근 인력 평균치는 97.1명(중간값 60.0명)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정신건강 상근 인력 평균치인 32.5명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즉, 서울시 정신건강 상근 인력 수는 국제적인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상태이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 중 50% 이상인 15개 구(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송파구, 성북구,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노원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강서구, 강북구, 강동구)는 서울 전체 인구 10만 명당 상근 인력 평균인 32.5명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생활권이 비슷한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서남권의 정신건강 상근 인력이 다른 권역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인력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서울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sup>7)</sup>에 따르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문제점으로 크게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1) 근무 기관별 불균형, 2) 근무 지역별 불균형, 3) 인력 부족, 4) 장기 근무자 부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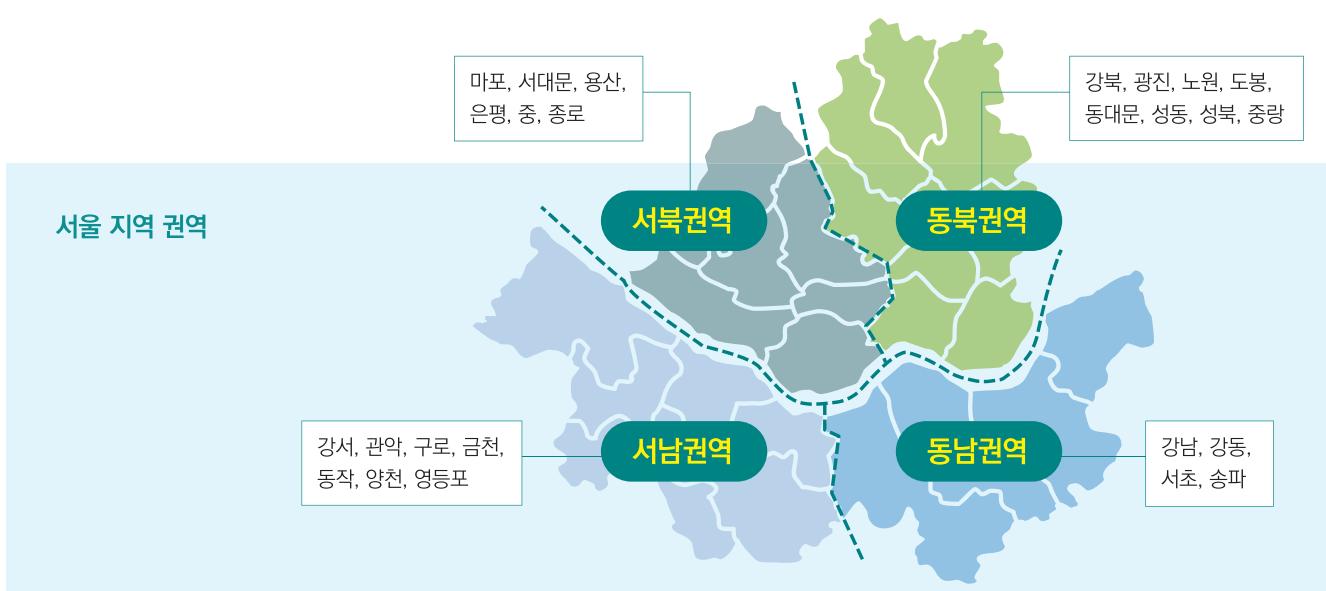
따라서 서울시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이상훈, 정신건강인력의 현황과 과제, 2020.

첫째,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 정신질환자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배치는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중재의 성격이 달라지고, 지역 내 중증 정신질환자 숫자에 따라 사례 관리를 해야 할 대상자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 정신질환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서울시 권역별, 자치구별 정신건강 인력 수요를 재평가해야 한다. 자치구별 중증 정신질환자 현황에 따라 지역 내 가장 필요한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일한 인력 및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치구 내 중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재평가 및 인력 추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서울시 중증 정신질환자 현황 파악과 정신건강 인력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전문 요원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영국, 호주 등)의 경우<sup>8)</sup> 중장기 정신건강 정책 발표 시 국가 정신건강 인력 대책과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 교육 체계를 같이 발표한다고 한다. 서울시도 5년마다 수립하는 정신건강 대책과 함께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확충 및 인력 교육 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8) 이상훈, 정신건강인력의 현황과 과제, 2020.